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1948

1971

돌베개

『한국민주화운동사 1』

민주화운동은 운동의 역사일까, 역사의 운동인가

글 · **정상호** shojeong2@hanmail.net

민주정부 10년이 야기한 집단적 착시 현상

한 국가의 성숙한 사회통합은 어떻게 달성되는가? 필자가 몇 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낸 결과를 소개하면 거기에는 대략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첫째는 공동체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적 해석이다. 프랑스 혁명과 그것의 결실인 공화주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자긍심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전수되고 있다. 오바마를 지지하였든 멕케인을 선택하였든 미국인들의 국부(Founding father)와 링컨에 대한 존경심은 초정파적인 것이다.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규범과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정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이다.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미국의 헌법은 무수한 중대 결함을 지닌, 원리상으로는 작동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미국인들이 작동시키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는 사회적 갈등, 특히 노사대립의 해소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서 다원주의적 이익정치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은 정치적 수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적 해석(과거), 헌법(현재),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미래)에 구축되는 역사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념적 분열 현상의 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열은 역사 논쟁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정부의 이념적 전사를 자임하고 있는 뉴라이트 단체와 지식인들은 이승만의 건국 역사를 분단의 기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을 종속적 · 권위주의적 산업화로 간주하여 온 민주화 세력의 역사 인식을 수정주의 좌파의 '자학적 역사관'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에서 이들은 최근 현대사 교과서 개정문제와 '건국 60년' 해석, 서울시 교육청의 현대사 특강 등 역사 논쟁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뉴라이트가 제기한 역사 해석 논쟁과 현실의 사태는 민주주의 과정이 굴절은 있어도 회귀는 없다는 진보적 역사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고 있다.

사실 지난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이제 파시즘이나 권위주의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구축되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었다. 그러나 뉴라이트가 제기한 역사 논쟁은 그러한 믿음이 집단적 착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소중히 일깨워주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작업한 『한국민주화운동사1』(돌베개)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나 그것을 기록하는 일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자 기억투쟁' 이라는 사실을 재삼 상기시켜 주고 있다.

운동사의 주요 내용과 구성

『한국민주화운동사1』은 시기적으로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서부터 1971년 학원병영반대투쟁, 광주대단지 생존권 투쟁까지 약 20여년의 시기를 3부 10장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사1』이 기존의 역사 서적들과 구분되는 덕목이자 발전 중 하나는 가독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독자 중심의 기획과 편집이다. 개성이 강한 7명 집필진의 공동 성과이지만 전반적으로 쉽고 간결한 문체의 서술로 통일되어 있고, 흥미로운 사진과 보충 설명들이 내용 없이 방만한 학술 논문의 각주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책의 출판 목적이 일반 시민

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양질의 대중적 교양도서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1부 1장(이승만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에서는 전쟁이라는 비상시국 하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비상사태인 부산정치파동을 살펴보고 있다. 학술적으로 충분히 조명 받지 못했던 부산정치파동은 한국정치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몇 가지 정치 현상들의 근원임을 발견하게 된다.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제 소환운동 역시 최초였으며, 극우보수단체인 백골단, 땃벌떼 등의 정치깡패가 출현한 것도 이 때였다.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라 칭송되는 지방자치제가 그 전쟁 통에서 이승만의 민의 동원을 위해 전격 실시되었고, 야당인 민국당과 여당인 원내 자유당이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각책임제를 강력 추진하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제 2장(4월혁명)에서는 4월혁명의 구조적 원인을 확대된 선거와 교육 열기를 낳은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6년 지방선거와 58년 4대 민의원 선거에서 도시를 거점으로 한 야당인 민주당의 세력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1960년 3 · 15 부정선거는 장기집권에 눈이 먼 이승만 정부의 시대착오적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제 2부는 해방 직후를 제외하고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였던 4월혁명에서 5월 쿠데타까지의 짧았던 1년을 정리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부 사이에서 늘 스쳐지나갔던 허정 과도정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부분이다. 허정 과도정부가 밝힌 시정방침을 보면 내각책임제 개헌, 3 · 15 부정선거 책임 규명, 경찰의 정치적 중립, 3개월 이내 정권 이양 등이었다. 필자들은 과도정부에 대해 인사혁신에 실패함으로써 부정축재자와 부정선거 주모자들의 처리에 미온적이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내각으로서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장면 정부의 평가 역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장면 정권에 대한 주류적 해석은 분열과 혼란으로 5 · 16 군사 쿠데타를 촉발한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장면정부는 민주당 신구파의 극심한 내분과 분당, 소장파의 반발, 총리 장면과 대통령 윤보선의 대립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취약한 정부임에는 틀림없다. 필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은 '정신적 · 지적 · 사상적 영역이 활기를 찾고 확대된 자유화 공간'에서 발생한 자연스런

일로서 '정상적 사회로 가기위해 겪어야 할 사회재조정 과정' 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써 1961년 3월과 4월에는 장면의 리더십과 정부의 치안과 관료 장악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함의하는 바는 장면 정부의 무능력과 당대의 극심한 혼란의 이미지는 후대의 군사정권이 유포시킨 '과장된 사실' 일 수 있다는 것이다.

3부는 박정희 정권의 성립 과정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사1』 역시 쿠데타의 성공 요인으로 세 명의 행위자, 즉 대통령 윤보선과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그리고 미국이 보인 행동의 소극성과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현안이 현 시점에서 한일협정반대투쟁에 대한 분석은 적지 않은 시사점과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논평자가 보기에 두 개의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최대 · 최장의 시위참여 인원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한일협정반대투쟁은 1964년 3 · 24시위에서 촉발되어 박 정권 하야를 내건 6 · 3사태로 정점에 올랐고 이듬해 8월 26일 위수령 선포를 계기로 종결되었던 2년에 걸친 '역사적 사건' 이었다. 이 밖에 두 사건을 반대하였던 저항세력들의 논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한 종속(신식민주의)과 미국에 대한 종속(신자유주의)의 우려, 굴욕적 · 저자세 외교라는 국민적 자존심의 손상, 일당국회의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무엇보다도 주변 정세와 경제를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사에서 간과되었던 '광주대단지사건' 이 민중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1971년 8월 경기 광주대단지 투쟁은 기회의 땅 도시에 대한 농민의 동경심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도시의 흡인유인과 농촌의 영세 소농체제와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인한 농가 경제의 궁핍이라는 농촌의 압출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1970년대 최대의 대규모 주민항거였다. 광주대단지투쟁을 보면서 독재정권 하의 급속한 산업화에서 희생되었던 도시빈민 포괄적으로는 서민의 곤궁한 삶이 40여년이 지나 성공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노래하는 오늘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독창적 해석의 부족과 자료의 한계

익히 알려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가 갖는 숙명적 난제는 참신함의 압박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해석에 입각하여 앞선 연구들과 차별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성공한 출판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1』은 앞서 설명한 주요 진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겨 놓았다.

가장 큰 한계는 새로운 자료와 독자적 해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국민주화운동사1』은 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승리를 호남에서의 압승과 조봉암 약진 지역(진보적 지역)에서 나타난 사상논쟁의 효과(민족적 민족주의 담론)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입증할 최소한의 근거와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논평자가 보기에 이러한 한계는 최근 진보적 학술운동의 취약점, 즉 현대사 연구의 기피 현상에 따른 연구자 기근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 결과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적 지식인들의 공세적 역사 논쟁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연구 성과들이 드물고, 승만이즘과 백범이즘과 같은 신조어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튀어나오는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저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화운동사1』은 거의 7백여 쪽에 달하는 두툼한 역사책을 단숨에 읽게 만드는 귀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면면히 이어지는 견고하고 오랜 뿌리를 갖고 있으며 종료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일과 사건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민주화 운동사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운동의 한 유형인 '사회운동의 역사' 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힘 또는 시민의 생명력이 역사의 추진력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입증해주고 있다. 향후 발간될 『한국민주화운동사』 시리즈가 한국의 민주주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독자적인 '민주주의 학(學)' 의 정립에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 **정상호** shojeong2@hanmail.net